

여야 오염수 공방...“괴담선동 정치” vs “日 망동 막아야”

김기현 “인체 무해가 과학적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 천명해야”
민주당 대책위 ‘끝장 토론’ 제안

여야는 28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설전을 이어가는 등 일본 오염수 문제가 정국을 휘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공세에 대해 “결국 축창가, ‘방탄용 반일’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비춰보면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과학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무리하게 억지 부리면서 ‘나치 괴벨스’ 식의 날아빠진 선전·선동을 하던 길거리 투쟁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한다”며 “민주당이 앞뒤가 꽂꽂인 ‘큰대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공포 조성을 멈춰달라는 어업인들의 호소도 들은 체하지 않고 오히려 테러, 전쟁 선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 가며 국민의 반일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리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일 선동이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목불인견(目不忍)의 주말이었다”면서 “은갖 추태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정치, 국민적 외면과 국제적 망신으로 이제는 사라질 운명일 뿐”이라며 “‘민주당’과 ‘괴담’은 사라지고, ‘국민’과 ‘팩트’만이 남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민주당의 반일 공세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이르자 방탄용 반일 반정부 선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아붙였다. /연합뉴스

김기현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결국 축창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당대표의 지저분한 치부를 숨기기 위함”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닷새째인 이날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권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일본의 망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일주일간 구내 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난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보다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아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쇼’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라리 오염수를 대통령실로 퍼와서 대통령실 식용수로 한번 사용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30% 중반대 (국정)지지율이 깨지고 곧 20%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오염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및 양당 추천 전문가가 공개 토론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피해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토론하자”면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 입법 대응에도 부심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이후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방사성 물질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방류 이후 오염수 총량 1534m³, 삼중수소 2460억 베크렐”

도쿄전력 제공 데이터 발표
“삼중수소, 기준치 크게 하회”

정부는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534m³(153만4천L),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460억 베크렐(Bq)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방류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km 이내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Bq)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4 탱크(방류직전 탱크)에서 측정된 69

개 핵종 농도와 관련, ‘고시 농도 비율 총합’(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값)은 0.28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값이 1을 넘으면 해당 오염수는 다시 ALPS(다핵종 제거설비) 정화를 거쳐야 한다. K4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해수배관에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차장은 말했다. 배출 목표치는 리터 당 1500Bq 미만인데, 방류 시작 이후 리터 당 최소 142Bq, 최대 200Bq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가 방류 전에 모이는 상류 수조의 삼중수소 농도도 방류 전 측정된 결과 리터 당 43Bq에서 최대 64Bq를 기록, 배출 목표치인 L(리터)당 1500Bq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도쿄전력이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도 제시했다. 박 차장은 “해수 취수량 7.5~8.5cps, 상

류수조 4.8~5.3cps, 이송펌프 4.7~5.8cps가 각각 기록돼 방류가 평시 수준으로 안정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PS는 초당 방사선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도쿄전력은 시간당 1만3750m³(1375만L) 이상의 해수에 22m³(2만2000L) 미만의 오염수를 희석해 배출할 계획이며,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m³(1만9130L)로 해수 희석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날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출국한 3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박 차장은 “현지에 있는 IAEA 사무소 관계자와 1차 미팅을 한번 한 것까지는 보고받았다”며 “이후 언제까지 체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IAEA가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정부, 수입이력 있는 2만곳 대상

정부가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로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점 품목을 포함해 수입 이력이 있는 약 2만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5~6월 실시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업체당 점검 횟수도 3배 강화하겠다”며 “한 업체를 3번 이상 지속해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특별점검인 만큼 해수부 정부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 점검반,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 및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37.6%...전주보다 2.0%p 올라

리얼미터...국힘 36%·민주 4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주만에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25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p포인트(p) 오른 37.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7월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

(36.6%→37.3%→37.5%→38.3%)를 보였다가 직전 조사에서 2.7%p 하락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소폭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8%p 내린 59.4%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일별 지지율은 22일 38.5%, 23일 37.7%, 24일 37.8%, 25일 36.7%의 흐름을 보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6.7%p ↑)와 70대 이상(5.6%p ↑), 50대(3.8%p ↑), 60대(1.9%p ↑)에서 올랐고, 30대(4.9%p ↓)와 40대(1.2%p ↓)에선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

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다. 한편, 격주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2%, 더불어민주당이 44.2%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0.9%p 오른 3.2%, 무당층 비율은 2.1%p 오른 14.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